

데스크 시국



박진현 문화·예향 담당 국장

1년 여 만에 다시 찾은 제주도는 '딴 세상'이었다. 코로나19로 썰렁했던 게 언제였나 싶게 유명 관광지에는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활기가 넘쳐 났다. 그중에서도 지난해 제주시 애월읍에 문을 연 '아르떼뮤지엄 제주'는 단연 인기였다. 몰입형 미디어아트 상설 전시관인 이곳은 성인 기준 1만 7000원이라는 만만치 않은 입장료에도 하루 평균 3000여 명이 다녀가는 명소가 자리 잡았다. 과거 스피커 제조 공장(면적 1399평, 높이 10m)을 리모델링해 열 개의 주제대로 나뉜 아나볼릭, 프로젝션 매핑, 홀로그램, 증강 현실(AR) 등의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는 관람객들을 환상의 세계로 이끈다.

관광 1번지 된 '아르떼뮤지엄'

검은 커튼이 드리워진 입구를 지나면 가장 먼저 '꽃'(Flower) 전시관이 나온다. 제주의 상징인 수만 개의 동백 꽃잎이 천장이나 벽면에서 피었다 사라지자 여기 저기서 탄성이 터진다. 세계적인 역량을 자랑하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인 (주)디스트리크 코리아가 홀로그램 기술로 화려한 색채와 사운드를 입히고 대형 거울을 이용한 수십 개의 프레임으로 몰입도를 높인 효과다. 또한 '파도'(Wave) 전시관에 입장하면 강렬한 비트와 거대한 파도가 마치 관람객들을 집어 삼키는 듯한

은펜칼럼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명예교수 한반도미래연구원장

2022년 대선 당시 진보 진영 사람 다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준비 부족과 가족 문제로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되었다. 2007년 이명박 후보, 2012년 박근혜 후보, 2017년 문재인 후보도 도덕성이나 능력 면에서 우리가 컸지만, 대통령이 되었다. 선거라는 게 그랬다. 아마 다음에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임기 초반부터 20~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우리나라 제도는 그가 아무리 정치를 잘못해도, 그리고 지지도가 지금보다 더 떨어져도 변함없이 대통령직에 머무르게 할 것인데 말이다. 최후의 카드로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지만, 그것은 지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꺼내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헌법을 명백하게 어겼을 때만 허용되는 절차이며, 그것도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야 가능하다. 한마디로 대통령을 배출할 국민의힘

기고



박진영 공감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전남대 객원 교수

사과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일이다. 잘못을 반성할 뿐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사과는 먼저 피해자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해야 진정성을 가질 수 있다. 사과에 그러한 공감의 흔적이 없다면 이는 제대로 된 사과라고 볼 수 없다. 다음은 사과할 때 피해야 하는 말들이다.

첫째,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한 웹툰 작가가 팬 사인회를 하면서 행사 일정의 지연을 사과하는 과정에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표현한 것이 화제가 됐다. 일부 독자들은 "심심"을 지루하다는 뜻으로 오해하면서 논란이 됐고, 젊은층의 문해력 논란으로 확대됐다. "심심한 사과"는 매우 길게 사과 드린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사과를 해서 진정성이 드러나기 어렵다. 말을 하는 이유는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사과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해야 한다.

둘째, "제 말이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제주·여수·강릉, 그리고 부산

스틸을 느끼게 한다. 언제부터가 제주도는 미디어아트 도시라는 타이틀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지난 2018년 성산읍에 개관한 국내 최초의 몰입형 미디어아트 체험관 '빛의 방카'에 이어 아르떼뮤지엄 제주, 옛 서커스장을 개조한 '노형수퍼마켓'이 연이어 들어서면서 디지털 영상, 음향 등을 공간과 결합시켜 미디어아트의 발신지로 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아르떼뮤지엄'은 많은 지자체들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귀신님이다. '아르떼 제주'가 대박을 터뜨리면서 디스트리크는 지난해 각각 여수와 강릉에 지점을 내는 등 전국구 브랜드로 비상중이다. 여기에 최근 부산광역시도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아르떼뮤지엄 부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지난 6월 부산시는 디스트리크와 '아르떼뮤지엄 부산' 건립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부산에 건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순수 민간자본 110억 원을 투자해 건립되는 '아르떼 부산'은 부산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담은 미디어콘텐츠를 통해 글로벌 관광명소는 물론 향후 NFT(대체 불가능 토큰)을 기반으로 국내 디지털 미술 시장을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광주에서도 미디어아트가 지역 문화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답답할 뿐이다. 다른 도시들이 미디어아트의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다면 2014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된 광주는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다. 얼마 전 폐막과 동시에 졸속 운영 논란을 빚은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과 철거될 위기에 처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미디어월'(Media Wall)이 그 예다. 올해로 10화째를 맞은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를 상징하는 대표 축제이지만 '연륜'에 걸맞은 역량과 노하우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ACC의 랜드마크이자 콘텐츠 홍보 플랫폼인 '미디어월'도 마찬가지로 신세다. 지난 2017년 2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의 현장을 온전히 살려내야 한다는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 취지에 따라 존폐 기로에 처한 것이다. ACC의 건물이 모두 지하에 들어앉은 단점을 보완하고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랜드마크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데도 말이다.

허울뿐인 '미디어아트 광주'

광주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국내 유일의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다. 물론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된 이후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창설, 핵심 시설인 미디어아트 플랫폼 'GMAP' 개관, 유네스코 창의벨트 추진 등 인프라 조성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다운 위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광주에는 미디어아트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경험의 장(場)이 많지 않다. 특히 핵심 인프라인 GMAP의 스케일과 콘텐츠는 미디어아트의 매력력을 느끼기에는 아쉬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 다른 도시들이 경쟁력 있는 몰입형 상설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유치해 시민들의 안목도 높이고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제 무대에서 통하는 '유네스코'라는 로고는 돈으로 환산하기 힘들, 부가가치가 높은 자산이다. 현대미술 축제인 광주비엔날레와 동시대성을 핵심가치로 내건 ACC의 콘텐츠와 연계된다면 다른 곳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라는 글로벌 브랜드를 키우는 건 결국 광주의 몫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이제 버릴 때도 됐다

도, 그리고 국회에서 17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 민주당도 지금의 헌법 하에서는 대통령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 삼권분립은 형식적인 뿐 실제로 대통령은 입법부와 사법부 위에 군림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뿔아 놓고 5년 동안 후회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하는가? 아직도 진보나 보수 진영은 자기편에서 대통령을 배출하면 반대 파들을 한칼에 베어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보수 진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그런 쾌감을 맛보았는가? 진보 진영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성취감을 가져보았는가?

선진 민주국가 중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 등 극소수 국가에 불과하며 대부분 국가는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과 프랑스 등은 우리식 대통령제와는 거리가 멀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지방 정부에 많은 권력을 위임하고 있고, 의회가 예산 심의와 고위 공직자 임명권 동의, 외교 정책 등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등에 집중하고, 내지는 총리가 담당하고 있다.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2017년 필자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소속 분과위는 권력 분과위였다. 권력 분과위에 소속된 위원 11명 중 2명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2명은 내각제를, 나머지 7명은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를 지지했다. 필자는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를 지지했다.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채택한 권력 구조는 권력분산형 대통령제였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에게 기획·재정, 통일, 외교, 국방의 권한을 부여하고, 총리에게는 나머지 내각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었다. 기획·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는 재정 편성권을 통해 모든 부서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국방, 외교, 통일에 덧붙여 기획·재정권을 부여한다면 대통령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 동시에 권력 분산을 도모할 수 있다.

총리는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이 제도 하에서 총리는 대부분 부서의 장관 추천권과 국정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명실상부하게 제2인자 역할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출신이든 민주당 출신이든 우리가 현재, 그리고 과거에도 상사구 겪었던 대통령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조국 파동 이후 최근까지 대한민국 사회가 겪고 있는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은 해방 후 신탁통치를 둘러싼 좌우 대립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이 갈등과 대립은 대부분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진영 간 경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위헌 수위를 넘나드는 국민 갈등을 치유하고 대통령제가 갖는 부정적 요소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권력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내각제든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든 빨리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저출산, 기후 위기, 경제적 어려움, 신냉전체제 등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아닌 통합적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과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붙이는 것은 변명이다. "미안해. 하지만 네가 오해하게 만들었잖아." 이런 사과는 사과라고 할 수 없다. 변명이고, 도리어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다. 사과만 하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제대로 사과하지 못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상대방의 아픈 감정을 위로하는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은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란 말이다.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했다면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흘 만에 사과의 말을 했다. 이 장관은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사과라는 말을 쓰지 않고 '유감'이라고 표현했다. 또 참사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했다. 뒤늦은데다, 진정성을 흐리는, 적절치 못한 표현을 담은 사과의 말이 희생자 가족과 국민을 더욱 슬프게 했다.

社說

'입법 전쟁' 지역 현안 해결 법안 통과 힘 모아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 마감되면서 입법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로 지역 현안 관련 법안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 현안 법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기 위한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 갑)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이전 및 지원 사업 때 기부 대 양여 부족분과 사회간접자본·산업단지·이전 지역 지원 등의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례도 포함됐다. 전남도의 핵심 현안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도 법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민주당 김원이(목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은 풍

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통합해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총리 소속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6·7년 이상 걸리는 풍력발전 인·허가를 평균 34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도 여야가 주도로 추진하기 위한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 갑)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이전 및 지원 사업 때 기부 대 양여 부족분과 사회간접자본·산업단지·이전 지역 지원 등의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례도 포함됐다.

전남도의 핵심 현안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도 법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민주당 김원이(목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은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통합해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총리 소속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6·7년 이상 걸리는 풍력발전 인·허가를 평균 34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교통사고 다발 지역 시설 개선·안전 강화를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빅데이터를 분석해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2034곳을 선정, 최근 발표했다. 공단은 교통안전도 향상을 위해 매년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보행자와 고령 보행자, 이륜차, 음주운전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609곳 가운데 광주는 여섯 곳, 전남에선 15곳이 포함됐다. 광주 시 광산구 운남동과 여수시 교동 여수교 부근에서 각 아홉 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전국 269곳의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가운데 광주에서는 화정동과 양동, 양림동이, 전남은 여수 교동 등 11곳이 포함됐다.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경우 광주는 서구 쌍촌동에 세 곳이 몰려 있고, 전남은 목포시 상동과 순천시 연항동이 최다 사고 지역으로 꼽혔다. 음주운전

사고 다발 지역에는 광주의 서구 화정동 화정사거리 등 여섯 곳, 전남에선 여수시 여서동 등 두 곳이 포함됐다.

도로교통공단이 공개한 데이터는 광주·전남 보행자와 이륜차, 음주운전 등 다양한 유형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한눈에 보여 준다. 우려스러운 것은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는데 비해 고령자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단이 공개한 빅데이터 자료를 잘 활용하면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특정 장소에서 어떤 유형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다. 내비게이션에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현장 점검을 벌여 위험 지역의 시설 개선과 안전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無等鼓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헌법 제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각종 법률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156명 젊은 청춘들의 생애같은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벌어졌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112 신고가 빚뒀졌음에도 국가의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말이다. '10·29 이태원 헬러인 참사'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가 그 의무를 저버린 현 정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국가의 책무

다. '국민 안전'이라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도외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만 보이면서 희생자들에 대한 미안함은 오로지 국민 몫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일은 국가의 의무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다. 윤사(律士) 출신들이 대거 포진한 현 정부 관계자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과 각종 법률을 다시 한번 숙지해야 할 것이다.

회를 최우선으로 하는 각종 법률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156명 젊은 청춘들의 생애같은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벌어졌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112 신고가 빚뒀졌음에도 국가의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말이다. '10·29 이태원 헬러인 참사'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가 그 의무를 저버린 현 정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다. '국민 안전'이라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도외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만 보이면서 희생자들에 대한 미안함은 오로지 국민 몫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일은 국가의 의무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다. 윤사(律士) 출신들이 대거 포진한 현 정부 관계자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과 각종 법률을 다시 한번 숙지해야 할 것이다.

경찰 모두 '주최 측이 없

는 행사여서 매뉴얼이 없었다'는 변명만 내세

워 여론의 못매를 맞았

다. '국민 안전'이라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도외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만 보이면서 희생자들에 대한 미안함은 오로지 국민 몫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일은 국가의 의무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다. 윤사(律士) 출신들이 대거 포진한 현 정부 관계자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과 각종 법률을 다시 한번 숙지해야 할 것이다.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cki@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